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연구진

홍근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봉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I	서론	
	1. 연구배경	04
	2. 연구목적	06
<hr/>		
II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현황 및 특징	
	1. 인구 현황	07
	2. 인구변화 현황	09
	3. 전입·전출인구 현황	12
	4. 시사점	19
<hr/>		
III	국내외 주요 사례	
	1. 국내 사례	24
	2. 국외 사례	30
<hr/>		
IV	생산가능인구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	
	1. 기본방향	39
	2. 연령대별 생산가능인구 확대 방안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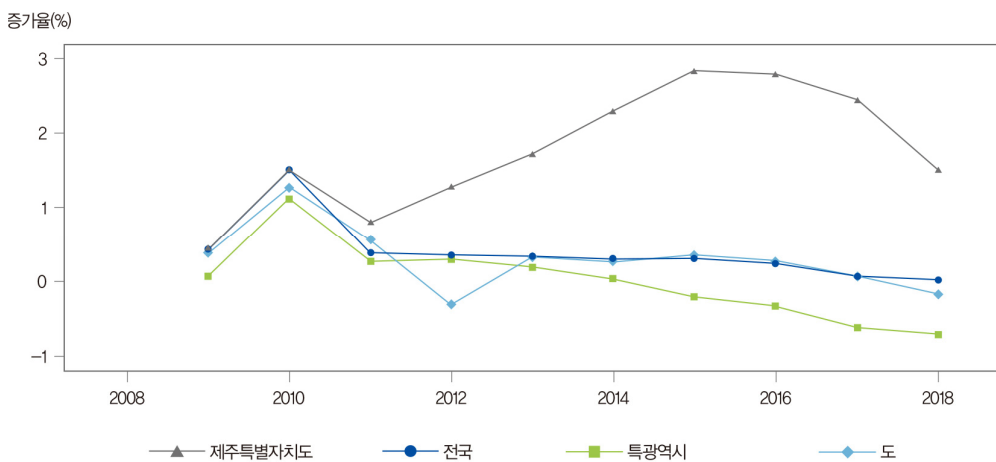
I 서론

1. 연구배경

인구 증가 추세의 둔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18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음
 -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4%로 전국 평균인 0.3%보다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15년 2.81%에서 2018년 1.54%로 1.27%p 감소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순이동인구의 감소

-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의 둔화는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순이동인구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최근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연평균 자연 증가 인구는 -11.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사회적 증가 인구는 2010년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 연평균 34.7%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18년 6월 이후부터 순이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년대비 순이동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 2018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인구는 2017년 대비 3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

-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중심으로 순이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18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472,7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가 완화되고 있음
 - 특히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생산인구(25~49세)의 비중이 2014년 36.8%에서 2018년 35.9%로 감소하였음
 - 그리고 순이동인구의 측면에서 볼 때, 20~40대 전출인구가 2014년 13,582명에서 2018년 18,473명으로 약 5,000명 증가하였음
-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4년 13.6%에서 2018년 14.4%로 증가하여,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하기 위한 생산가능인구 수는 2014년 5.17:1에서 2018년 4.91:1로 감소하였음

2. 연구목적

생산가능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는 자연인구 감소가 아닌 사회적 인구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되므로, 인구의 전입·전출 측면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연구는 생산가능인구를 20대, 30~40대, 50대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령대별로 전입·전출 비중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입·전출의 이유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연령대별 전입·전출 현황 및 시사점을 파악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연구원 기획과제(2019)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음
- 지금까지 수행된 다양한 연구 및 의견 조사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생산가능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인구구조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연령대별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현황 및 특징

1. 인구 현황

총인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인구증가율은 최근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2.81% → 1.54%)
 -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2009년 562,663명에서 2018년 667,191명으로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18.6%)
 - 최근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총인구의 연평균 증가율(1.76%)은 전국 평균(0.4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음

연령별인구

-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산연령인구보다 고령인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음
 - 특히 핵심생산연령인구(25세~40세)의 경우 2017년에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0.7%만 증가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별 인구 현황 |

(단위 : 명, %)

연도	총인구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핵심생산연령인구 (25~49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2009	562,663	0.4	106,283	-3.2	389,674	0.8	224,374	-1.0	66,706	3.9
2010	571,255	1.5	103,551	-2.6	398,063	2.2	224,184	-0.1	69,641	4.4
2011	576,156	0.9	101,220	-2.3	402,356	1.1	221,639	-1.1	72,580	4.2
2012	583,713	1.3	99,758	-1.4	408,030	1.4	220,655	-0.4	75,925	4.6
2013	593,806	1.7	98,936	-0.8	415,565	1.8	220,931	0.1	79,305	4.5
2014	607,346	2.3	98,461	-0.5	426,474	2.6	223,704	1.3	82,411	3.9
2015	624,395	2.8	97,811	-0.7	440,691	3.3	227,877	1.9	85,893	4.2
2016	641,597	2.8	98,117	0.3	454,291	3.1	232,769	2.1	89,189	3.8
2017	657,083	2.4	98,727	0.6	465,239	2.4	237,806	2.2	93,117	4.4
2018	667,191	1.5	98,261	-0.5	472,723	1.6	239,519	0.7	96,207	3.3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http://kostat.go.kr/>)

- 2014년과 2018년의 연령대별 인구를 비교하면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인구수가 증가하였으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이상이 유소년 및 청년층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인구 중 40대와 50대 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나, 2014년 대비 2018년에는 50대 이상 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30대와 40대의 인구 비중은 2014년 대비 2018년에 감소함
 - 10대 이하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대는 증가함
- 인구 비중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핵심생산인구(25세~49세)와 유소년 인구(0~14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유소년인구 비중은 2009년 18.9%에서 2018년 14.7%로 4.2%p 감소하였음
 -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1.6%p 증가하였으나 핵심생산연령인구 비중은 4.0%p 감소하였는데, 이는 생산연령인구의 고령화를 의미함
 - 고령인구는 11.9%에서 14.4%로 2.5%p 증가함에 따라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¹⁾

지역별인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인구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각각 73.4%와 26.6%으로 지역 간 인구집중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다만 최근 5년간(2014~2018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제주시가 8.3%, 서귀포시가 14.3%로 최근 서귀포시의 인구증가율이 높은 실정임
- 2018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43개 읍면동 별 인구규모를 살펴보면 총인구의 56.5% (376,665명)가 제주시 동권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됨
 - 읍·면지역의 인구를 살펴보면 애월읍(35,451명), 조천읍(24,106명), 대정읍(21,364명), 한림읍(21,309명) 등 제주시 동권역 인접지역의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정읍의 경우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의 영향으로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됨

2. 인구변화 현황

자연적 증가

- 지난 10년(2009~2018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 증가 인구(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감소세가 크게 확대됨
 - 제주지역 자연 증가 인구는 2009년 2,610명에서 2018년 90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1.2% 수준임
 - 같은 기간 전국 자연 증가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9.5%로 제주지역보다 감소세가 높음

1) 통계청의 2019년도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에서는 총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로 구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7년 초고령 사회(20.1%)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그러나 기간별로 살펴보면 2009~2012년 기준 자연 증가 인구증가율은 1.8%였으나 2012~2015년 기준 증가율은 -6.4%, 2015~2018년 기준 증가율 -26.4%로 감소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 증가 인구 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9	2012	2015	2018	증가율			
					'09~'12	'12~'15	'15~'18	'09~'18
제주	2,610	2,754	2,261	900	1.8	-6.4	-26.4	-11.2
전국	197,907	217,329	162,525	28,002	3.2	-9.2	-44.4	-19.5

주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청(<http://kostat.go.kr/>)

- 제주지역 출생아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전국 평균(-3.4%)보다 낮지만, 최근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 제주지역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전국 평균(2.1%)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

(단위 : 명, %)

구분		2009	2012	2015	2018	증가율			
						'09~'12	'12~'15	'15~'18	'09~'18
출생아 수	제주	5,433	5,992	5,600	4,781	3.0	-2.2	-5.1	-1.4
	전국	444,849	484,550	438,420	326,822	2.9	-3.3	-9.3	-3.4
사망자 수	제주	2,823	3,238	3,339	3,912	4.7	1.0	5.4	3.7
	전국	246,942	267,221	275,895	298,820	2.7	1.1	2.7	2.1

주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청(<http://kostat.go.kr/>)

사회적 증가

- 최근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인구(총전입 수-총전출 수)²⁾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전입은 둔화하고 전출은 증가하여 순유입 감소 규모가 확대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인구는 2009년 -1,015명에서 2016년 14,632명으로 최대치에 달하였음
 - 그러나 제주지역 총전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총전출 수는 2012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2013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 2018년 기준 전입인구는 2017년 대비 6.1% 감소한 반면 전출인구는 9.3% 증가하여 순이동인구는 2017년 대비 36.8% 감소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인구 추이 |

(단위 :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전입(A)	20,902	21,717	22,862	25,221	28,244	32,835	38,544	40,381	41,752	39,189
총전출(B)	21,917	21,280	20,519	20,345	20,421	21,723	24,287	25,749	27,747	30,336
순이동(C=A-B)	-1,015	437	2,343	4,876	7,823	11,112	14,257	14,632	14,005	8,853

주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 특히 2018년 6월을 기점으로 전년 대비 순유입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순이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 2018년 1분기 기준 순이동인구는 3,171명인 반면, 2019년 1분기의 순이동인구는 752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2) 순이동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인구수를 의미하며,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경우는 전입초과(순유입), 전입 보다 전출이 많은 경우는 전출초과(순유출)로 정의됨

- 도내 순유입(전입-전출) 인구는 20~40대 등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주도하고 있음
 - 세대별로 살펴보면 30대(33.1%), 40대(22.3%), 9세 이하(17.4%), 50대(13.9%), 60대(6.6%), 10대(3.4%), 70세 이상(1.7%), 20대(1.6%) 등임
 - 순 유입 인구 중 9세 이하 유년 인구 비중이 높은 것은 자녀를 동반한 가족 동반(30~40대) 이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3. 전입·전출인구 현황

전입인구 현황

- 최근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입인구(다른 지역에서 제주지역으로의 인구 유입)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제주지역 전입인구는 2009년 20,902명에서 2018년 39,189명으로 연평균 7.2%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18년 제주지역으로의 전입인구는 2017년 대비 -6.1%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전입인구의 연령별 규모를 살펴보면 50대(연평균 11.2%) 및 60대 이상(연평균 10.1%) 전입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2018년도 기준으로는 20대(20.3%) 및 30대(21.8%) 전입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입인구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기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81.6%이며, 핵심생산연령인구(25~49세)는 51.1%를 차지함
 - 다만, 핵심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09~2012년 기준 -0.6%, 2012~2015년 기준 -1.3%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었음

- 최근 10년간 유소년인구 비중(연평균 -1.2%)과 핵심생산연령인구(연평균 -0.6%) 비중이 감소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층별 전입인구 비중 추이 |

(단위 : %)

구분	2009	2012	2015	2018	증가율			
					'09~'12	'12~'15	'15~'18	'09~'18
유소년인구	15.10	15.10	14.20	13.50	0.1	-2.0	-1.6	-1.2
생산연령인구	80.10	80.00	80.90	81.60	0.0	0.4	0.3	0.2
핵심생산연령인구	54.00	53.10	51.10	51.10	-0.6	-1.30	0.0	-0.6
고령인구	4.90	4.90	4.90	4.90	0.2	0.2	-0.1	0.1
제주전입인구	100.00	100.00	100.00	100.00	-	-	-	-

주 : 고태호(2019), 「제주 인구 유출입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주연구원, p.24

- 전입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제주지역 전입인구의 64.8%(25,386명)가 제주시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남

전출인구 현황

- 최근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출인구(제주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는 201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규모도 확대되었음
 - 2009~2012년 기준 제주지역 전출인구 증가율은 -2.5%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3~2018년 기준 전출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나타남
- 전출인구의 연령별 규모를 살펴보면 50~60대 전출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09~2018년 기준 제주지역 연령별 전출인구 규모를 분석한 결과 50대는 연평균 9.4%, 60대 이상은 연평균 7.0% 증가함
 - 반면 2018년 기준으로는 전출인구 30,336명 중 20대가 25.7%(7,793명), 30대는 18.5%(5,624명), 40대는 16.7%(5,056명)을 차지하였음

- 전출인구는 최근 10년간 모든 세대에서 증가하였으나, 총 전출자의 약 60~63%가 20~40대로 구성됨
- 제주 전출인구의 전출 전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시 동 지역에서의 전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 전출인구의 전출 전 거주 지역 분석 결과, 제주시 지역에 거주했던 경우가 67.6%, 서귀포시 지역이 32.4%로 제주시 지역에서의 전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시 동지역에서의 전출이 50.4%로 비중이 높고, 이외 서귀포시 동지역(18.1%), 애월(5.7%), 대정(4.7%) 등의 전출이 많음
- 전출지역은 주로 수도권 지역임
 - 2018년 기준 도외 전출지역을 살펴보면, 20~40대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58%(10,78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15~19세, 20~24세는 서울지역으로의 인구 순유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 거주기간별 전출인구 분석결과, 거주 2년 미만인 인구의 전출 비중이 49.4%를 차지하였으며, 최근에는 거주 4~6년 이상, 6~8년 이상 인구의 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제주지역 거주 1년 미만인 인구의 전출이 가장 높으며(30.8%), 거주 1년 이상 2년 미만인 인구의 전출이 18.6%임
 - 2015~2018년 기준으로는 6년 이상 8년 미만인 인구가 78.9%, 4년 이상 6년 미만인 인구가 4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는 거주 4~6년 이상, 6~8년 이상 인구의 전출이 급격히 증가함
 -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제주지역 내 대학 입학 등을 이유로 전입한 인구가 학교 졸업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

| 제주특별자치도 전출인구의 제주지역 거주기간 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9	2012	2015	2018 (비중)	증가율			
					'09~'12	'12~'15	'15~'18	'09~'18
1년 이하	5,895	5,214	7,799	9,334 (30.8)	-4.0	14.4	6.2	5.2
1년 이상~ 2년 미만	4,693	824	4,411	5,650 (18.6)	-44.0	74.9	8.6	2.1
2년 이상~ 4년 미만	4,674	1,258	6,164	6,317 (20.8)	-35.4	69.8	0.8	3.4
4년 이상~ 6년 미만	485	1,339	1,128	3,721 (12.3)	40.3	-5.6	48.9	25.4
6년 이상~ 8년 미만	151	667	238	1,362 (4.5)	64.1	-29.1	78.9	27.7
8년 이상~ 10년 미만	93	3	6	9 (0.0)	-68.2	26.0	14.5	-22.9
제주도민 (10년 이상)	5,889	11,041	4,531	3,929 (13.0)	23.3	-25.7	-4.6	-4.4
합계	21,880	20,346	24,277	30,322 (100.0)	-2.4	6.1	7.7	3.7

주 : 고태호(2019), 「제주 인구 유출입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주연구원, p.35

인구이동 요인

-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입 및 전출의 주요 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등으로 나타남
 - 전입 사유는 직업(44%), 가족(23%), 주택(13%), 교육(6%)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전출 사유 역시 직업(38%), 가족(30%), 주택(15%), 교육(8%)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연령별 가족동반 비중 분석결과, 10대 이하가 가족동반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 동반 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령별로는 10대 이하(80.3%) 및 40대(38.4%), 30대(33.6%) 등의 가족동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대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3년간 전입 및 전출 사유 |

(단위 : 명, %)

구분	2016				2017				2018			
	전입	비중	전출	비중	전입	비중	전출	비중	전입	비중	전출	비중
계	40,381	100	25,749	100	41,752	100	27,747	100	39,189	100	30,336	100
① 직업	18,430	46	9,635	37	19,008	45	10,214	37	17,214	44	11,473	38
② 가족	9,881	24	7,785	30	9,468	23	8,288	30	8,893	23	8,996	30
③ 주택	5,867	14	4,241	17	6,242	15	4,510	16	5,288	13	4,596	15
④ 교육	2,010	5	2,088	8	2,586	6	2,314	8	2,409	6	2,530	8
주거환경	733	2	359	2	667	2	488	2	645	2	594	2
자연환경	1,889	5	247	1	2,126	5	293	1	2,196	6	324	1
기타	1,571	4	1,394	5	1,655	4	1,640	6	2,544	6	1,823	6

주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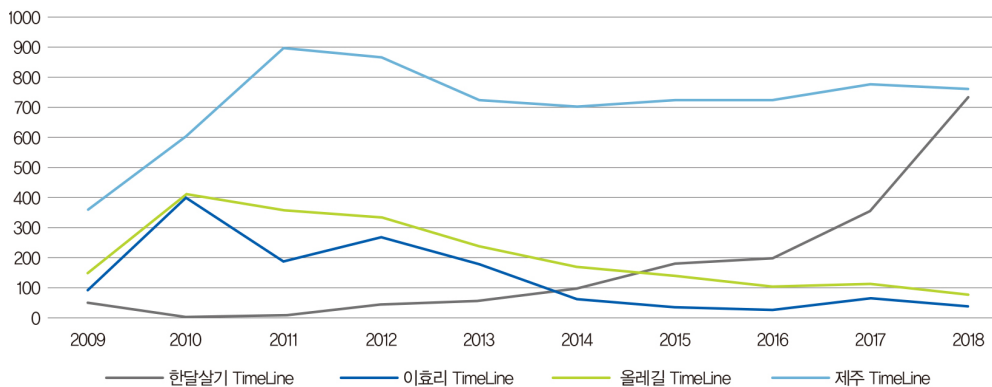
인구이동 관련 트렌드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이동은 전입의 경우 2015년도에 상승 추세가 완만해지기 시작한 반면, 전출자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함
 - 이러한 인구이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트렌드³⁾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긍정적 키워드의 트렌드 분석결과, 2010년까지 제주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커졌다가 점차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와 긍정적으로 관련 있는 키워드로 ‘올레길’, ‘한달살기’, ‘이효리’, ‘제주’ 등의 키워드를 분석함
 - 분석결과 ‘올레길’의 경우, 2010년도를 최고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효리’의 경우, 2010년을 최고점으로 하여 2012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3) 구글트렌드 분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석방법임. ‘구글 검색창에 해당 키워드를 얼마나 많이 검색했느냐’의 높고 낮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 관심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한달살기’의 경우 지난 2010년 및 2011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새로운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 추세가 변화하기 전에 정책적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긍정적 키워드 트렌드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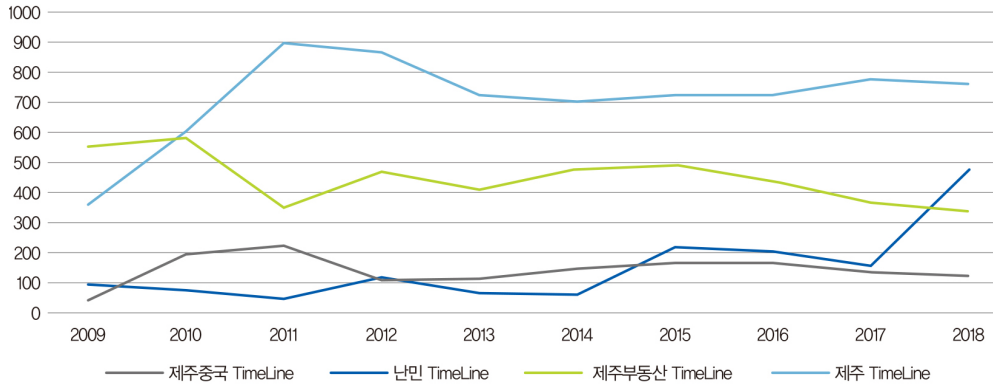


자료 : 구글 트렌드 분석 결과 활용, 구글 트렌드(<https://trends.google.co.kr/trends/?geo=KR>)

- 부정적 키워드에 대한 트렌드 분석도 실시한 결과 ‘제주중국’은 꾸준히 언급되고 있으며 최근 ‘난민’ 등의 키워드가 증가함
 - ‘제주중국’, ‘난민’, ‘제주부동산’ 등의 키워드를 부정적 키워드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제주중국’의 경우 2009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언급되고 있음⁴⁾
 - ‘제주부동산’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 상대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난민의 경우, 2018년 예멘 난민들의 집단난민신청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음

4) ‘제주중국’보다는 ‘제주도 중국인’ 등 보다 구체적인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 하지만, 구글 트렌드에서 구체적인 키워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모호한 키워드인 ‘제주중국’으로 검색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도 관련 부정적 키워드 트렌드 분석 |



자료 : 구글 트렌드 분석 결과 활용, 구글 트렌드(<https://trends.google.co.kr/trends/?geo=KR>)

- 다음으로 언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보도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한 결과 ‘관광객’, ‘경제’, ‘중국’, ‘관광’ 등의 키워드가 자주 보도되는 것으로 분석됨
 - 분석을 위해 각종 언론사의 신문기사 등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빅카인즈(<https://www.kinds.or.kr/>)를 활용하여 ‘제주’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뉴스를 검색하였음
 - 기사추출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19개 신문사⁵⁾를 선정하여 53,237개의 기사를 추출하였음
 - 분석결과 중국 관광객 유입, 중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 중국 자본에 의한 제주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기사가 많았음

5)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이상 중앙지),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이상 경제지) 등 19개 신문사를 선정하였음

4. 시사점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순이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함
 - 2018년 하반기 이후부터 전입인구와 전출인구 간 차이가 줄어들면서 순이동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임
 - 장기간 지속되어 오던 순이동인구의 증가 추세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순이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 2018년 하반기 이후를 중심으로 순이동인구의 감소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20~40대 등 핵심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생산가능인구의 확대’라는 인구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생산가능인구의 유치뿐만 아니라 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 정착 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연령대별 수요에 맞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연령대별 시사점

□ 20대 관련 시사점

- 2018년 기준 제주에서 전출하는 도민 중 약 40.4%가 20대이므로 청년층의 전출을 최소화하고 도외에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및 교육·훈련기회 지원, 여가·문화 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이 요구됨

- 제주지역 청년이 지역 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주요 요인은 일자리 및 교육·훈련기회, 여가문화 생활 여건에 대한 불만 등임(고태호, 2019)
- 「2018 제주사회조사」 결과, 지역 청년이 이주를 고려하는 이유는 일자리(21.9%), 교육 훈련 기회(16.8%), 여가문화 생활(21.9%) 등임
- 청년층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제주지역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제주지역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 관련 정책은 자기계발 등을 위한 청년 활동수당 지급(29.6%), 진로체험과 공공사업을 통한 다양한 일 경험 프로그램 개발(20.2%),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12.4%) 등임(제주특별자치도, 2018)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와 연계하여 도내에서 필요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3차산업인 관광 중심의 서비스업과 1차산업인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2차산업인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따라서 대기업 유치 등과 같은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내 잠재적 기업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다만 IT산업 등 지리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기업 유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청년층의 교육·훈련기회 지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점을 살린 교육서비스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 지역 대비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편이고, 사설학원이나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교도 타 시도에 비해 적은 등 교육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역별 전입인구 분석결과 영어교육도시 인접 지역인 대정읍 및 안덕면의 전입 인구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서비스는 도외 인구 유입과 정착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이를 참고하여 교육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및 혁신 학교제도 등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적 이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청년층에게 산학연 협력에 의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20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가·문화서비스 지원 정책이 필요함
 - 20대가 이주를 고려하는 이유 중 일자리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가·문화 서비스 지원 정책임
 - 문화서비스 만족도 분석결과 특히 20~30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문화 여가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판단됨(제주특별자치도, 2019)

□ 30~40대 관련 시사점

- 30~40대 인구의 전입은 현시점의 핵심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의미도 있지만, 10대 이하의 가족을 동반하여 전입하는 경우가 많아 미래의 핵심생산가능인구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30~40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입 및 정착지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0~40대의 지역 내 전입 및 정착 유도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자녀교육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2016)에 따르면 15~39세의 인구이동 요인은 일자리 및 보육시설이며, 40~69세의 인구이동 요인은 일자리 및 교육서비스 등으로 나타남(강동우, 2016)
 - 이러한 맥락에서 30~40대의 제주지역 전입 및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자녀교육서비스 지원 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주택가격과 지가상승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주 지역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제주지역으로의 전입에 대한 제약요인 및 정착주민의 전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7년 1.7%, 2018년 1.0% 수준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6년에는 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
- 지가변동률은 2016년 7.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2017년 4.96%, 2018년 4.74%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2010년 249건과 비교할 때, 2017년은 1,514건으로 약 6.08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2018년은 1,452건(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1,330건 대비 9.17% 증가하였음(한국감정원, 2019)
- 반면 제주지역 건설산업은 2017년 이후 침체되기 시작하여 건설경기가 점차 악화되고 있음⁶⁾
 - 2019년 8월 기준 건축허가면적은 136,030m²로 전년 동월대비 12.1% 감소하였고, 건축착공면적은 109,578m²로 전년 동월대비 62.4% 감소하였음
 - 2019년 8월 기준 건설수주액은 311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1.1% 감소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2019)
- 주택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 부족이 우려되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지원 정책이 필요함
 - 핵심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하는 20~40대 정착주민의 경우 주택 및 토지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음
 - 따라서 주택 임차료 지원이나 행복주택 사업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공공서비스 관련 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거주지를 연결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공공교통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6) '제주 건설경기 침체 지속... 활성화 대책 주목'(제주新보 보도자료, 2019.4.5)

□ 50대 이상 관련 시사점

-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경제활동 재진입, 의료시설 및 공공요양시설, 치매센터 등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제주지역의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6개소 등 병의원 435개소, 치과의원 207개소, 한의원 181개소, 조산원 1개소, 보건소 6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47개소 등이 있음
 - 제주지역의 인구천명 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7.40 수준으로 전국 평균 13.55 보다 낮은 수준이고 고령화될수록 수요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 등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인프라 확대가 필요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의료기관의 76%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2018년 기준 인구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국 평균은 8.89개소인 반면, 제주 지역은 4.76개소로 나타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보건 복지부, 2019)



국내외 주요 사례

1. 국내 사례⁷⁾

20대 관련 정책

(1) 일자리정책

□ 대전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

- 대전은 과학도시이면서 농업이 중요 산업인 곳으로 지역주민간의 소통 부재로 공동체 활성화가 어렵고 소득, 학력 및 문화 격차가 존재함
- 유성구와 사회적 협동조합인 품앗이마을은 2015년부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인증제인 ‘바른유성찬’을 도입하였음
 - 2015년부터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먹거리 교육과 취업·창업교육, 농촌체험여행, 어린이 텃밭학교, 로컬푸드장터 등을 운영함
- 4개 로컬푸드 매장, 52명 고용, 누적매출 113억 원의 사업효과와 유성구 농산물 인증 제도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개발 교육으로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경남 거창군 ‘협업적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

- 거창군의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민·관 전문가와 행정협의를 통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주민의 역할증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였음

- 마을사업 통합시스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을 로컬푸드, 귀농귀촌, 마을개발, 도농교류, 문화복지공동체 등 5대 핵심사업으로 재분류하여 운영함
- 마을대학을 수료한 75개 마을 중 90%(68개 마을)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년층 인구가 유입되었음

(2) 주거정책

□ 경기 행복주택 ‘BABY2+ 따복하우스’

-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총인구, 노인 인구, 다문화 인구 등이 최다인 곳으로 대도시와의 진입·전출이 활발하여 다양한 지역적 특성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였음
- 경기도 행복주택인 ‘BABY2+ 따복하우스’는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가구 전용공간 확대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
 - 따복하우스 외 다양한 지역 편의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제공하고 지역별로 인구 특성에 맞춘 설계를 제공함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청년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

(3) 문화정책

□ 경기 수원시 ‘청년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기반 청년창업’ 사업

- 경기도 내 문화예술 관련 55개 대학의 386개 학과, 35,000여 명의 재학생의 문화예술 관련 창작 및 창업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이 필요하였음

- 방치되어 있던 옛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총 268,487㎡, 81,350평)를 활용하여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경기생활문화센터, 경기생생공화국 등을 운영함
 - 도내 대학 문화예술 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반의 생업과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교류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학, 예술경영지원센터, 영국문화원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형성함
 - 우수 청년문화공간 형성으로 타 기관의 롤모델을 마련하고 청년플랫폼 축제 개최 및 다양한 인큐베이팅 성과를 도출하였음

30~40대 관련 정책

(1) 일자리정책

□ 경북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

- 영주시는 정보부족과 경험부족에 따른 귀농·귀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One-Stop 지원센터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소백산 귀농드림타운)'를 조성하여 예비 귀농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도시 예비 귀농인 유치 및 전입을 유도함
-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기술을 교육하여 안정적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귀농인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 주거정책

□ 강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 도내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하여 서민계층의 출산 및 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3년간 주거비용을 지급함
- 2017년 강릉시는 158쌍에게 1억 8천 648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신혼기간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문제 및 저출산 극복의 극대화와 효과성을 전개하여 사회분위기 전환에 기여함

(3) 보육정책

□ 부산 사상구 아동전문 보건지소 및 아이맘 원스톱센터 조성

- 부산시 사상구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영유아와 엄마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책을 도입함
- 2017년 5월 말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저출산 극복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한 후 아동전문 보건지소를 조성하였음
 - 건강검진, 예방접종, 육아상담 등 제공하며 어린이 아토피 예방교실 등 아동성장 단계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신·출산·육아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
- 보건의료서비스와 양육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여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가 가능해져 임신부와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맞춤형 저출산 극복에 기여함

50대 이상 관련 정책

(1) 의료·복지정책

□ 경북 성주군 ‘벽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성주군 벽진면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병원, 약국 등 기본적인 의료·건강시설, 목욕탕, 운동시설, 문화시설 등이 전무한 열악한 정주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 벽진면 수촌리 일원에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였으며, 신축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들도 주체적으로 시설물 관리 운영에 참여함
- 주민들이 센터 신축부터 건축 후 유지관리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별도의 소득 창출 없이 주민 스스로 문화와 건강복지사업을 진행함

(2) 교통정책

□ 전북 완주군 ‘500원 으뜸택시’ 운행

-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골지역은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 교통편의 향상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군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함
- 이에 완주군은 시내버스 승강장과 거리가 500m 이상인 산간, 오지, 벽지 마을과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신청을 받아 ‘500원 으뜸택시’를 운행함
 -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시내에 나와 일을 마친 후 함께 귀가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며, 택시를 타는 주민이 1인당 500원을 내면 추가비용은 완주군이 매월 택시운송 업체에 일괄 정산함
- 2015년~2016년 500원 으뜸택시는 월평균 약 2천 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통해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킴

기타 : 인구정책

□ 충남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 사업

- 부여군 가족행복지원실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 복지증진, 여성 및 다문화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함
 - 인구증가 등 지원조례 개정, 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생아·노인 등 복지 및 다문화 토탈케어서비스 지원, 정주환경 조성, 귀농·귀촌인 지원 등 실질적인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함
- 복지예산 증가와 주민들의 복지수요 증가에 맞추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복지 문제를 분석하고 복지시책 개발이 가능하며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국내 인구정책 사례 |

구분	분야	주요 사업
20대	일자리	대전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 경남 거창군 '협업적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
	주거	경기 행복주택 'BABY2+ 따복하우스'
	문화	경기 수원시 '청년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기반 청년창직' 사업
30~40대	일자리	경북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
	주택	강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보육	부산 사상구 아동전문 보건지소 및 아이맘 원스톱센터 조성
50대 이상	의료	경북 성주군 '벽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교통	전북 완주군 '500원 으뜸택시' 운행
기타	인구정책	충남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 사업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2. 국외 사례⁸⁾

20대 관련 정책

(1) 교육정책

□ 일본 아마정(海士町) 고등학교 매력화 프로젝트

-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마네현 아마정(海士町)은 학생 수 감소, 섬외 인구 유출, 교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유일한 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함
- 2010년 학교·지역 연계형 공립학원 ‘오키국 학습센터’를 설립(도전 고향 매력화 재단 운영)하고 ‘도전고교 매력화 프로젝트’를 개시하여 2012년 전국으로부터 학생을 모집하는 ‘섬 유학’을 시작하였음
 - 다문화나 다양성을 고교 내에 도입하여 학교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2015년 문부 과학성의 슈퍼글로벌 하이스쿨로 지정되어 세계 8개국과 교류하고 해외 연수 등의 교육환경을 갖추
- 지역 자원과 인재를 활용한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는 현지 학생을 자극하고 섬 밖 학생의 확보로도 이어짐

(2) 일자리정책

□ EU 청년 농업인 직불금 제도

- 1950년대 말부터 유럽연합 내에서는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후 1992년에는 직불제(Direct Payment)가 도입되어 농장 규모가 클수록 직불금을 더 받게 되었음

8) 박승규·여효성(2018), 「제주 인구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박진경·김상민(2018),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채종현 외(2018), 「지방소멸대응 경북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경작 규모가 작아 직불제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의 액수가 작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2014년부터 소농직불제(Small farmers direct payment)를 실시하여 18~40세 젊은 농업인 (영농경력 5년 이하)에게 최대 5년 동안 ‘청년농업인 직접 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을 지급함
 -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농장도 직불금 혜택을 받게 됨

□ 일본 시마네현 고오츠시(江津市)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

- 고오츠시·NPO 법인인 고넷트이시미·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기업가 지원 컨소시엄은 2010년부터 ‘비즈니스 플랜·콘테스트(Go-con)’를 개최하여 지역 과제 해결 비즈니스를 모집하고 젊은이들을 발굴함
 - 일본해신용금고는 용자나 사업계획 지도, 고오츠상공회는 경영지원, 고오츠시는 창업지원제도가 지원기관의 소개·이주 지원 등을 실시함
 - 콘테스트 수상자를 중심으로 2012년 역전 상점회 청년부를 결성하여 빈 점포 정보를 공급하거나 창업을 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이 경연대회를 계기로 8건(증설 포함)의 기업유치에 성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함

(3) 문화정책

□ 일본 카미야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KAIR)

- 창조산업으로 산촌도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제문화마을 설립 등을 추진함
- 이를 위하여 2004년 카미야마초에 산간부의 마을의 전 호에 케이블용 광섬유망을 정비하고 매년 9월부터 2개월간 국내외에서 3명의 작가를 초빙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AIR 사업을 추진하였음

- 예술가를 지원하는 마을로서 이주나 관광객이 증가하였으며 IT·디자인·영상 관련 기업 등 기업들의 이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30~40대 관련 정책

(1) 일자리정책

□ 일본 지방창생정책

- 일본의 아베정부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 도쿄권의 인구집중 방지, 지방에서도 살기 좋은 환경 확보를 통한 미래 일본사회 유지 등을 위하여 「마을·사람·일 창생법」을 제정함
- ‘인구감소·고령화 → 소비여력 저하 →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 고리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유지를 통한 마을·사람·일자리 선순환구조를 도모하였음
 - 사람과 일자리의 선순환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이들을 지역이라는 맥락에서 지원토록 하는 장소기반(place-based)의 지방창생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였음
 - 대도시권, 지방도시, 중산간지역 등 발전 방향과 특성을 토대로 콤팩트와 네트워크 원칙에 충실하도록 지역공간구조의 재편을 유도·지원함

□ 일본 이로가와지구 정주형 취농프로그램

- 지역 내 폐교를 개조하여 귀농·귀촌 촉진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취농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함
 - 1977년 유기농업 이주 가구인 5개 가구가 지역 조직으로 설립된 ‘경인사’와 이로가와 지역진흥추진위원회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였음
 - 체험형(2박 3일의 농촌 체험메뉴), 실습형(3일간의 실습 준비 오리엔테이션 및 1주에서 1년간의 농업실습), 정주형(이주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5일간의 정주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 중산간 집락기능 강화 등 촉진사업을 적용하여 국가 및 현으로부터 60%의 보조를 받아 귀농·귀촌 촉진 거점으로 활용함

- 체험 후 이주 확정을 결정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정주촉진반이 공가 및 농지 등을 소개함

(2) 주거정책

□ 일본 오카야마현 신조촌 빈집을 활용한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

-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은 2017년 지역재생법 개정에 따라 일본 내각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임
 - 빈집을 활용하여 마을 내 생활서비스 기능을 집약화하고, 텔레워크를 위한 공동 시설 정비와 고령자용 생활지원 시설정비
 - 기차역 주변 신선식품 판매기능을 추가하여 식품소비를 촉진시키고 마을 내 순환을 위한 차량운행을 실시함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중산간 지역 등에서 지역주민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과 지역을 연계한 ‘작은거점’을 형성하여 최소한의 일상적인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

□ 일본 교토부 아야베시 정주지원사업

- 아야베시는 2008년 정주 희망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아야베시 정주 서포트 종합 창구를 설치하여 주택, 취농, 지역 관습 등 정주에 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함
 - 빈집을 활용하여 정주 희망자에게 주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주 지원 주택(정주를 위한 공영주택)을 설치하고, 빈집 구입을 지원하거나 빌린 주택의 개수 공사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시행함
 - 아야베시 정주 서포트 종합 창구를 설치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희망자들의 관심이 실제로 지역이주 및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
 - 시설 및 보조금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주자 교류 모임 등도 개최함으로써 실제 귀농·귀촌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보육·교육정책

□ 프랑스 보육·교육정책

- 프랑스는 일찍부터 수당 중심 지원체제로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이민자 가정, 동거가족, 미혼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음
 - 출산휴가는 16주이며(셋째 자녀 이상 26주, 쌍둥이는 최대 34주), 휴가기간 동안 소득 대체율 100% 또는 최대 월 3,000유로를 제공함
 - 가족수당, 출산수당 및 영아양육수당, 취약계층을 위한 가족보조금, 아이돌보미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지급함
 - 프랑스는 영아에게는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거나 가정보육 시 부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아에게는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등 공교육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됨
- 프랑스의 가족지원정책은 다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높으며 아버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발견 가능함

(4) 교통정책

□ 일본 도야마시 대중교통중심 압축도시

-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 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가속화 가운데 분산된 도시구조로 인한 행정비용 상승,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철도노선이 많은 도야마 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교통노선을 ‘축’으로, 대중교통 노선의 거점을 ‘핵’으로 한 다핵 압축도시조성을 추진하였음
 - 도야마코 철도노선을 활용하여 ‘도야마 경전철(TLR, Toyama Light Rail)’과 시내전 환상선을 건설하고 노선을 따라 거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 도시 거점시설을 집적시킴

- 인구증가의 효과와 함께 OECD(2012)의 ‘컴팩트 시티 정책(Compact City Policies) 보고서’에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됨

50대 이상 관련 정책

(1) 의료·복지정책

□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및 지역포괄지원센터

- 일본 정부는 최근 고령사회대책을 개정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을 확립하였음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고령자의 생활 안정과 안심 그리고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등의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주택을 거점으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제공되도록 하는 지역 체제를 말함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으로 고령세대로 진입한 초기고령자들에게 새로운 사회참여 및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

□ 일본 와지마시 고령자 데이 서비스

- 와지마시는 거주형, 방문형 노인 복지 서비스 외에 통근형 서비스를 도입함
 - ‘아스나로엔’이라는 통근형 사업소는 노인 1일 방문 등 통근을 중심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혼자 거동할 수 없거나 간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기 전의 고령자를 위한 통근형 데이 서비스를 제공함
 - 1회 이용 시 고령자 본인 부담금(1,000엔) 이외의 비용은 시가 부담함

-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자를 위한 종합서비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보호 및 간호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활력을 재충전하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함

기타 : 인구정책

□ 미국 축소도시 영스타운

-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은 철강 산업의 쇠퇴와 함께 인구감소, 상점·오피스·주택의 높은 공실률 등을 겪는 등 도시 쇠락의 길을 걷게 됨
- 인구규모에 비해 너무 큰 인프라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스타운 2010’을 수립하여 압축도시를 형성하였음
 - ‘인구감소’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주거지역의 30%, 상업지역의 16%를 축소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함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정부는 지역 간 협력, 자연친화적 도시 환경 제공, 마호가니 강(Mahogany River) 재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함
- 영스타운은 스마트 성장에서 스마트 축소로 도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2007년 미국 계획가협회(APA)의 공공부문 국가계획상을 수여함

□ 미국 세제 감면제도

- 미국은 인구증가율이 최근 8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각 주정부들은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인구이동을 통한 인구증가를 추진하고 있음
 -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워싱턴주 등의 소득세율은 0%이며, 이들 주정부의 최근 8년간 인구증감률은 10% 이상으로 나타남
 -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정부는 인구 유입 및 고용 창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 일본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

- 일본의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는 고향납세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를 갖는 활동을 통해 관계인구⁹⁾를 증가시키고 미래의 이주·정주인구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GCF(Government Crowd Funding)를 활용하여 특정한 사업에 공감하는 사람으로부터 고향납세를 모아 이주교류 촉진사업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는 교류촉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및 고향납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기부자를 모집하고, 기부자는 ‘고향미래투자가’로서 응원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해 고향납세를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납세를 계기로 기부자와 계속적인 인연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부자를 비롯한 이주희망자에 대해 이주·정주대책사업을 전개함

| 국외 인구정책 사례 |

구분	분야	주요 사업
20대	교육	일본 아마정(海士町) 고등학교 매력화 프로젝트
	일자리	EU 청년 농업인 직불금 제도일 일본 시마네현 고오츠시(江津市)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
	문화	일본 카미야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KAIR)
30~40대	일자리	일본 지방창생정책 일본 이로가와지구 정주형 취농프로그램
	주택	일본 오카야마현 신조촌 빈집을 활용한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 일본 교토부 아야베시 정주지원사업
	보육	프랑스 보육·교육정책
	교통	일본 도야마시 대중교통중심 압축도시

9) 관계인구는 장기적 ‘정주인구’도 단기적 ‘교류인구’도 아닌, 지역과 지역의 사람들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고향’에 마음을 두고 있는 지역 밖 인재와의 계속적·복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인재의 ‘고향’과의 관련성을 심화·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gyosei08_02000136.html)

구분	분야	주요 사업
50대 이상	의료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및 지역포괄지원센터 일본 와지마시 고령자 데이 서비스
기타	인구정책	미국 축소도시 영스타운 미국 세제 감면제도 일본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

자료 : 박승규·여효성(2018), 제주 인구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박진경·김상민(2018),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채중현 외(2018), 지방소멸대응 경북 지역맞춤형 청년정책을 참고로 작성

IV

생산가능인구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

1. 기본방향

연령대별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장·단기 목표 설정

- 기존의 인구관련 연구들에서는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책들이 단순 열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청년층과 중년층 그리고 노인층이 고려하는 관심사가 상이함
 - 이러한 상이한 관심사 안에서도 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는 요인이 존재하는 반면 거주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덜 한 요인도 존재함
 - 한정된 자원 하에서 보다 효과적인 생산가능인구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가능한 방안들이 존재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가능한 사안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장·단기 목표에 따라 정책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함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연령대를 20대, 30~40대 그리고 50대 이상으로 구분함
 - 연령대별로 지역정착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열거한 후, 이에 대한 정책대안 및 방향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연령대별 생산가능인구 확대 방안

20대

□ 일자리정책

• 단기

- 도내 소재 기업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민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고용한 경우 도는 이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상호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이 있음
- 또한 ‘더 큰 내일센터’와 ‘제주청년센터’ 등의 청년 직업교육 및 훈련,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제공 및 창업 프로그램의 콘텐츠와 대상범위를 강화·확대하여 취업 준비 중인 도내 청년들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장기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관련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대규모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지역 내로 청년층을 유인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 그러나 최근 첨단 IT 기업들이 도내로 이주하고 있는 사례는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관련 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과 집적의 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입지선정에 있어서 기업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주거정책

• 단기

- 2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비용이 저렴한 주거

지나 주거형태를 선호하며 전·월세 등 임대방식의 주거 비중이 높음(또한, 통근과 문화·여가생활에 용이한 지역을 선호함)

-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초기 성과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의 경우 도심과 떨어진 부지에 주거지를 건설하기보다는 구도심의 건물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생활양식에 맞춘 임대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장기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도내 주택가격 및 지가의 상승이 두드러짐
- 도내 정착한 20대 청년층은 장래에는 임대형식이 아닌 주택을 보유하며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택관련 비용 상승은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도내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토지의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주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하여 주거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30~40대

□ 보육 및 교육정책

• 단기

- 보육관련 정책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보완점들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의 대상 연령(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및 시간(평일 9:00~18:00)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60개월(만 5세)과 평일 07:30~19:30 및 토요일 07:30~15:30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보육시설 수요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교육관련 정책의 경우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은 학교 인접지역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현재에는 기존에 계획된 7개 국제학교 중 4개 학교만이 운영 중이므로, 나머지 3개 학교 개교 시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도내 교육 환경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와 동시에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교육과정 특례가 적용되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가 필요함
- 장기
 - 제주도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지 않고 정원충족률도 전국 평균 수준임
 -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은 2018년 기준 전국에서 8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 보육시설의 공급 확대가 필요함
 - 그리고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도내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제주도의 주요 산업인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 현재 도내에 증가하는 IT 기업들의 특성을 활용하여 농어업관련 바이오산업 및 IT서비스산업에 특화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도내·외 학생 및 학부모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거정책

- 단기
 - 30~40대는 주거지 선택 시 보육 및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타 지역에서 유입된 30~40대의 경우 소유형식이 아닌 전·월세 형식의 임대 방식의 주거를 선호할 확률이 높음

- 이러한 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및 정착주민 대상 주거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대상 및 혜택을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도심과 떨어진 부지에 기존과 유사한 형태의 주거지를 새로 건설하기 보다는 구도심 주택이나 건물들을 개발하여 다양한 임대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장기
 - 도내 주택가격 및 지가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외부인구의 도내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주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주거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50대 이상

□ 의료복지정책

- 단기
 -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기 조성된 휴양기능을 접목한 요양시설들은 도외의 은퇴한 고령자들을 도내로 유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도의 고유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이러한 요양시설들을 더욱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장기
 - 도의 인구천명 당 의료기관 병상 수와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따라서 의료 및 복지관련 인프라에 대한 공급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때 타 지역 공급과의 단순비교를 통한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필요성이 높은 시설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교통정책

• 단기

- 시외권에 거주하는 고령자,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인구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대중교통으로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상당한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부담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주 교통복지카드의 대상연령을 낮추거나 혜택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장기

- 고령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발표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바이모달 트램, 노면전차, 모노레일 등 미래형 교통수단을 도입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계획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70세 이상 도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버스요금 면제제도와 같이 향후 도입될 신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이용요금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기타

□ 관광정책

• 체험 민박 중심의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로 수학여행을 오는 10대 학생들에게 민박가정체험 및 농산어촌

체험 등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도가 지니고 있는 매력을 유년층부터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도내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향후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함
- 일본 히로시마현, 아마구치현 등의 농산촌 지역에서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농산촌체험민박’을 통해 중산간지 및 도서지역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102개 학교의 14,168명을 수용하였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학생들(한국청소년대구연맹)도 일부 방문하였음

□ 의료정책

- ICT를 활용한 의료지원
 - 제주시 권역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지만, 나머지 권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
 - 제주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도내 병원들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Web회의 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Web회의 시스템을 통해 응급환자진료, 컨퍼런스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24시간 365일 체제로 응급의료상담을 접수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일본 히로시마현의 경우에도 도시권에는 의료기관이 많은 반면 중산간지역에서는 의사 부족 등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히로시마시내에 위치한 아사시민병원과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6개 의료기관간의 Web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였음

□ 이주지원정책

- 고향이주 희망자 지원 사업
 - 일본은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향이주 희망자 지원 사업(가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현재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고향이주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을 거소나 거주소로 등록하도록 할 수 있음
 - 개인이 향후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하여 거소 또는 거주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명예주민증 발급,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이주 희망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이주희망자 모집에 성공하면, 국가는 사업의 추진비용을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 지원함
 - 둘째, 일정 기간 이내 특정 지역으로의 이주를 확약한 개인에게 향후 이주에 필요한 활동에 대해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주택이나 토지 등을 구입하고 이주확약 지역을 거주소로 설정한 경우에는 주민세 등 지방세 중 일부를 거주소 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주택 및 토지 구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보육·의료·보건 등에 관한 바우처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함

□ 인구관리정책

- 전입·전출인구 관련 통계 DB 구축
 - 현재 전입·전출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이로 인해 전입·전출인구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전입·전출인구의 유형별 분류(출생지 기준, 전입·전출사유 기준 등) 및 사후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인구관리정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입·전출인구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DB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일선 주민센터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전입·전출인구 관련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참고문헌 |

- 강동우, 2016,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한국노동연구원.
- 고태호, 2019, 「제주 인구 유출입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주연구원.
- 박승규·여효성, 2018, 「제주 인구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김상민, 2018,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채종현 외, 2018, 「지방소멸대응 경북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대구경북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2018, 「2018 제주사회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2019, 「2019년 10월호 제주경제동향」.
- 한국감정원, 2019, '부동산시장 분석보고서-2018년 동향 및 2019년 전망'.
- '제주 건설경기 침체 지속...활성화 대책 '주목'(제주일보 보도자료, 2019.4.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 통계청, 「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구글 트렌드(<https://trends.google.co.kr/trends/?geo=KR>)
- 빅카인즈(<https://www.kinds.or.kr/>)
- 통계청(<http://kostat.go.kr/>)